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13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4	.	1
江原日報	[]	35	1
	()	.	2
강원도민일보		, FC	3
江原日報	21	FC	3
 연합뉴스		, FC	4
江原日報	03	“ ...	5
강원도민일보		,	6
강원도민일보	11		7
江原日報	15	48	7
江原日報	03		8
江原日報	10	115	8
江原日報	03	.	8
江原日報	02	-	9
강원도민일보	03		10
江原日報	01	尹 " "	11
江原日報	03	道 ‘ 가 ’	12
강원도민일보	04	’ ’ ...	12
강원도민일보	01	AI ' GPT'	13
강원도민일보	11	10 ...	13
江原日報	05	가	14
江原日報	12	500m 2	14
강원도민일보	06		15
江原日報	01	‘ 30cm ’	15
강원도민일보	23	[]	16
강원도민일보	23	[]	17
江原日報	19	[]	18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24

아이스하키·휠체어컬링 나란히 결승 진출 눈길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지난 10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대회 사흘째인 12일 강원도선수단은 금 2·동 1 총 3개의 메달을 획득, 총점 8961점으로 종합순위 3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서울(1만9254점), 2위는 경기(1만5855점)다.

첫 금메달 소식은 조은건-양희태 조(이상 도장애인체육회)가 알렸다. 이들은 지난 10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2인조(믹스더블)에서 '현 2인조 국가대표' 정대영-조민경

대회 3일째 금2·동1 획득 종합 3위
조은건-양희태·박진수 금빛 활약
도청 아이스하키 무실점 우승 도전

(경남선발)을 상대로 연장 9엔드 끝에 9-8 역전승을 거뒀다. 두 번째 금메달은 크로스컨트리에서 나왔다. 원종웅(강원일반)은 12일 남자 크로스컨트리 4km 클래식 IDD(동호인부)에서 11분39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박혜빈(춘천계성학교)은 여자 크로스컨트리 4km IDD에서 18분9초를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날 알파인 스키 회전 종목에서는 추현중(춘천 봉

의고)이 청각남자 알파인 회전 IDD에서 1·2차전 합산 2분48초73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고 박진수(강원일반)가 청각남자 알파인 회전 DB(선수부)에서 1·2차전 합산 1분50초72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다.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도청 아이스하키팀이 12일 충북선발과 4강전에서 25-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회 무실점 전승이라는 대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결승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선발을 상대로 열린다.

'현 4인조 국가대표' 이현출, 양희태, 장재혁, 조은건, 민영남(이상 도장애인체



김명선 도행정부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회위원장, 김용주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강원도선수단을 격려했다.

육회)도 휠체어컬링 4인조 4강전에서 경기선발을 7-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오는 13일 오전 9시 전남 선발을 상대로 치러진다. 심예섭

江原日報

2023 02 10 ()

[포토뉴스] 양구신협 제35차 정기총회



양구신협 제35차 정기총회가 10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엄재홍 신협이사장과 박유식 부군수, 박귀남 의장 및 의원, 이기찬 도의원, 신협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2 10 ()

(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릉시지회장 이·취 임식 개최

김지성 기자

(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릉시지회장 이·취임식이 10일(금)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권혁열 도의장 등의 주요 내빈 및 읍면동 협의회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석(교2동)지회장이 이임하고 최종원(교1동)지회장이 취임했으며, 이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이·통장연합중앙회 강릉시지회는 강원FC 강릉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에 동참하였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12 ()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시즌권 단체 구매

이설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강원FC 홍보 및 도민 체육·건강 증진 도모 등을 위해 최근 도의회에서 강원FC 2023시즌권을 단체구매하고, 김병지 강원FC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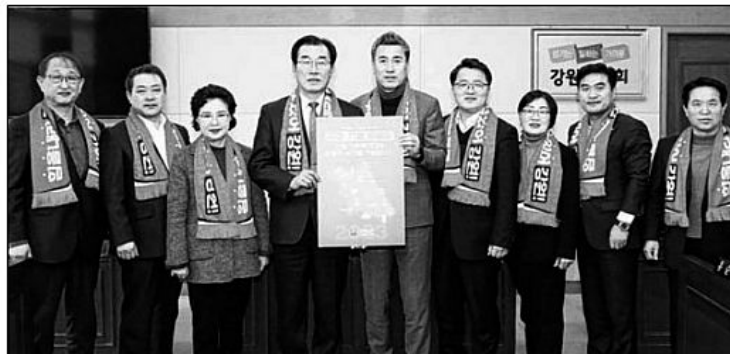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강원FC 홍보 및 도민 체육·건강 증진 도모 등을 위해 최근 도의회에서 강원FC 2023시즌권을 단체구매하고, 김병지 강원FC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 02 13 ()

21



도의회 사문위 강원FC 시즌권 구매 릴레이 동참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지난 10일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를 만나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2023 02 10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춘천=연합뉴스) 10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 행사에 참여한 뒤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10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끝)

江原日報

2023 02 13 ()
03

“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리 책임 정부에 조속히 이양토록 협력”

도의회, 업무 보고서 대책 촉구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도문화관광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정수(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에 관리 책임을 빠르게 이양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순옥(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3년 무상 사용 허가가 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지속적인 관광자원화가 이뤄지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은 “경기장 사후 관리는 올림픽 준비 때부터 불거진 문제로 과거의 연구 용역은 정부 입장대로 결과가 도출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림픽 시설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김정수 의원



◇유순옥 의원



◇최승순 의원



◇최재민 의원

가 형성된 만큼 법률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을 위탁 관리하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 수요가 많은데 특별자치도가 치르는 첫 국제대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국민의힘·원주) 도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도자치경찰 위 홈페이지에 추진 정책과 주요 시책, 교통 불편 신고 등 도민 소통 채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업수산위원회는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윤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12 ()

도의회 경산위, 탄소중립 및 수소산업 세미나 개최

김덕형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지난 10일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에서 '강원도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산업과 수소산업'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방안과 청정추출 수소플랜트,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클러스터 활용 정책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지난 10일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에서 '강원도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산업과 수소산업'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방안과 청정추출 수소플랜트,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클러스터 활용 정책을 논의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11

시골교회 문 열자 주민들이 몰렸다

신북읍이장협의회·신북장로교회
웃놀이 대회 개최 주민 화합 도모

2023 신북읍 주민 웃놀이 대회가 지난 11일 신북교회에서 열렸다. 신북읍이장협의회(회장 김준해)와 신북교회(위임목사이창봉)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육동한 춘천시장, 양속희 도의원, 권주상·박제철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을단

위 및 자생단체 등 19개팀 150여명이 웃놀이를 함께 즐겼고, 맥국농악팀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신북교회는 2012년 신북기부천사운동을 통해 신북읍과 신북읍이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장학금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나눔의 손길을 전해왔다.

평일에 교회 시설을 개방하며 문화공동체의 중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창봉 목사는 “도시적인 문화 보다는 신북읍 주민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를 함께 즐겨 너무 흐뭇하고 좋았다.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신북읍 주민 웃놀이 대회가 지난 11일 신북교회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양속희 도의원, 권주상·박제철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에 밥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같았다”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신북은 춘천에서 굉장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

역”이라며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의 밝은 표정에서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다. 김진형

江原日報

2023 02 13 ()
15



봉평신협 제48차 정기총회 봉평신협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봉평면 메밀꽃체육관에서 유상범 국회의원과 심재국 평창군수, 김범구 봉평신협이사장, 지광천 도의원, 김성기 평창군의회 부의장, 이은미 군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2 13 ()
03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
내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 총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최재석)는 14일 김광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전찬환 도립대 총장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16일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최재석 위원장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물론 도립대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江原日報

2023 02 13 ()
10

김유정 탄생 115주년 기념
작품 속 인물과 만남 성료

【춘천】김유정기념사업회가 지난 11일 춘천 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작품 속 인물과 주저리 한판’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상국 소설가, 이영춘 시인, 최지순 전 도예총 회장, 임미선 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예술인,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유정 탄생 115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됐다.

이정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배우가 아닌 작품을 읽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3 02 13 ()
0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국민의힘 도당 당원 성금 모금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도당은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성금 모금 계좌를 통해 실시되는 모금 활동에 도내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도 홍보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뜻으로 성금 모금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윤희기자

江原日報

2023 02 13 ()
02

김진태 지사-학부모 육아정책 함께 논의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 강릉서 열려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가 지난 11일 강릉 모루도서관 문화의집에서 개최됐다.

도가 주최한 이날 토크쇼에는 김진태 지사와 김종욱 강릉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육아기본수당 확대 지급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육아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존 만 4세까지 지원되던 육아기본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직접 밝혔다.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가 되는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한 윤정아(38)씨는 “도지사와 육아정책에 대해 직접 만나 논의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며 “강원도의 육아 복지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원도에서 8년 동안 총 지급하는 액수가 9,100만원이니 평균으로 따지면 1,100만원 연봉이 된다. 강릉시에서도 일정 부분 함께 출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강원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03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폐광지역 카지노 초과수익 지역 환원

강특별 개정안' 특례 조항 분석

미활용 군용지 매각·무상양여
지역 농·축·수산물 국가 우선 구매
대체산업 육성·주민 지원 재투자
카지노업 허가 도지사 권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진태지사가 건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다. 일선 부처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잘 협조하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밝히면서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전면적인 법개정 요구가 일고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을 읍·아했던 군사규제 부분을 완화, 실질적인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담도록 했다. 민통선 규제완화의 경우 군사분계선의 이남 5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접경·폐광지역 특례 조항

접경지역 관련 특례조항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내 민군복합단지 조성
- 민간인 통제한 및 제한보호구역 거리 완화
- 국방부 장관,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및 처분 전 토양오염 제거
- 미활용 군용지 매각, 무상양여 등 특례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團) 급식 공급지원

폐광지역 관련 특례조항

-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
- 폐광지역 내 채굴 경석(硬石) 광업법상 광물 자위 인정
- 카지노업 초과 수익금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재투자

한 특례를 뒀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접경지역의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선 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미활용 군용지 처분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미활용 군용지의 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도 정부가 제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 규정을 담았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국가가 우선 구매토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선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폐광지역의 경우 우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선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기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근거 조항 등을 통해 폐광지역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사업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 강원도와 폐광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방향,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3 02 13 ()

01

尹대통령 “중앙권한 과감히 이양”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약속 공식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색케이블카 진행 쟁길것”
김지사 특별법 통과 요청

강원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고 “(강원도에 대한 대선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윤 대통령이 강원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가 요청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정부와의 큰 마찰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의 완수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대

통령 1호 공약’이라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고, 도에서도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으로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잘 협조하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인 예시”라며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지사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강원도 현안들도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3 02 13 ()
03

道 발목 잡던 ‘환경영향평가 족쇄’ 풀린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강원도 내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왔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가 대상 사업이 겹칠 경우에는 환경부 평가를 적용하도록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년부터 시·도 조례 우선 적용 지역대 재정 지원도 지자체로

했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는 시·도 조례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

올해 안에 현황조사 및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사업계획 면적이 6만㎡(녹지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인 경우, 일정 기준의 체육시설, 골재채취, 어항시설,

기반시설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동해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도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수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도 도지사로 권한으로 넘긴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 권한을 종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 지역 운영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재정 지원관리권한을 확대하면서 지자체 주도가 필요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통합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무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04

도내 학교보안관 자원봉사로 대체 ‘안전 하향평준화’ 목소리

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확대 100명 미만 학교도 배치 가능 전문성·책임감 차이 논란 제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보안관을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로 점차 교체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직인 학교보안관과 달리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전문성, 효과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등교지도, 외부인 학교 출입 통제, 학교폭력 취약지역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다. 현재 316명(2월 10일 기준)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100명 이상의 초·중·고·특수학교에만 배치돼왔다. 그러나 도내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가 53%(341곳)에 달해 과반이 넘는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100명

미만의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늘자 올해부터 자원봉사 인력인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당 1~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에서는 직업으로 채용된 학교보안관과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 간에 전문성, 효과성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훈 강원도학교보안관협의회장은 “교육청은 자원봉사자를 쓰면 예산도 줄고, 처우개선 요구 등의 잡

음도 없을 테니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직’을 자원봉사로 대체하면 결국 안전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했다. 자녀가 최근 추천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보안관 부재를 몸소 겪었다. 해당 학교의 보안관이 1학기를 끝으로 퇴직했으나 학생 수가 100명이 되지 않아 후임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하교 교통통제에 문

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 학생 안전문제 등이 우려됐다. A씨는 본지 기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던 보안관이 퇴직하고 봉사자가 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치를 요구하는 모든 학교에 보안관을 배치할 수는 없다”며 “이원화로 운영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점차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정민엽

AI '서치GPT' 본격화 속 지역협업 묵묵부답



NAVER '각 춘천' 출범 10년

연구소 아닌 데이터센터로 설립
행정력 지원에 한때 특혜 시비
춘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강원도·춘천시 대응 관심 집중

글로벌 포털그룹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인 '각 춘천'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검색서비스 '서치GPT'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도 강원도형 데이터산업의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으나 네이버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도와 춘천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 9일 춘천 데이터센터 '각 춘천'에서 테크포럼을 열고 3분기문을 여는 '각 세종'을 통해 한국형 인공지능(AI) 검색서비스 '서치GPT'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등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각 춘천'을 가동, 출범 10년을 맞이했다.



데이터센터 각 내부 서버실과 메인조각 (사진 오른쪽)



포함,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수월에너지클러스터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중심은 결국엔 데이터산업이고 '각 춘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또 다른 정보산업업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는 네이버가 지역의 주력 산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SKC&C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한 데이터센터 분산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데이터센터 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각 춘천'의 지역 기여도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 데이터 창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 관련기사 11면

춘천시 동면 만천리 구룡산에 위치한 '각 춘천'은 축구장 7개 크기인 연면적 4만 6850㎡ 크기에 약 10만 유닛(Unit·서버의 높이 단위 규격)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강원도와 춘천시는 네이버의 NHN 연구소 설립계획을 믿고 행정력을 총동원, 지원에 나섰으나 네이버는 연구

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로 전환, 특별히 비까지 제기됐었다.

반면 '각 춘천'은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 센터 운영을 통해 데이터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네이버가 '각 춘천'을 통해 AI 등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과의 협업

을 통한 산업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수월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민선 8기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데이터산업의 주도권을 춘천이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역과의 협업을

지리적 이점 덕 무재해 10년... 상생은 물음표

NAVER '각 춘천' 출범 10년

'각 춘천' 10년은 네이버 입장에서 의미적이다. 네이버는 2013년 첫 가동 이후 약 10년간 무중단·무사고·무재해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하우로 올해 하반기 '각 세종'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각 춘천' 설립을 계기로 좀 더 지역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각 춘천'과 춘천의 지난 10년을 진단한다.

■무사고 배경 춘천 자연환경

'각 춘천'은 2013년 6월 첫 가동 이후 9년 8개월 간 무중단·무사고·무재해를 기록 중이다. 지난 9일 '각 춘천'에서 열린 테크포럼에서 네이버 측은 "'각 춘천'의 3대 운영 키워드는 무중단·무사고·무재해"라며 "지진, 정전, 화재, 산사태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시설을 구축했다"고 했

수도권 보다 기온 낮은 바람

서버실 열기 식히는 데 제력

지진 안전지대 소음피해 적어

지방세 납부 규모 들쭉날쭉

주민 700명 고용도 이전 여전

다. '각 춘천'의 모든 건물은 진도 6.5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으며 이는 국내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시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각 춘천'이 이처럼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춘천의 자연환경 때문이다. '각 춘천'은 춘천의 자연적인 바람을 활용해 서버실 열기를 식히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 춘천의 기온이 3도 안팎으로 낮기 때문이다. 외벽을 통해 들어온 자연바람을 필터로 두 차례 이상 거른 뒤 서버실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가동되고 있다. 이 같

은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각 춘천'이 냉방 기계실을 가동하는 날은 1년 중 30일 정도에 불과하다. 춘천이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라는 점, '각 춘천'이 들어선 구룡산이 주거단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가 적다는 점도 이점이다.

■지역상생 체감 '글썽'

지역상생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10년간 '각 춘천'을 따라다닌 꼬리표다. 70억 원에 이르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도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보안을 이유로 '각 춘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같은 지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방세 납부 현황도 들쭉날쭉하다. 춘천시가 파악한 지방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8억 원이던 지방세 납부 현황은 2021년 101억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9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역 주민 채용 효과성도 논란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연관 기업 등에서 700여 명을 채용하고 있

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질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각 춘천'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구룡산 카페거리 가장 전망 좋은 곳을 차지해놓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지역과 꾸준히 협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등으로 협업하고 있고 연관 기업에서 고용한 주민만 700여 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윤민섭 춘천시 의원은 "네이버 입장이 아니라 지역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지역상생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춘천시, 춘천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이승은

江原日報

2023 02 13 ()

05

양양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해당농장 2천여마리 사육 살처분
인근 농장 5곳 ... 확산 차단 총력

올 1월11일 철원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강원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양양의 한 농가에서 돼지 2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방역관이 현장 출동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200마리

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방역대에 해당하는 10km 내에 8개 농가가 위치하고 있어 도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이 중 7개농가는 인근 양돈밀집단지에 있는 손양면 내 농가에 해당해 방역 당국이 확산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양군 내 축산밀집단지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만 2만475마리에 이르는 데다 사람 혹은 양돈 관련 차량 이동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500m 이내 인근 지역에만 5개 농장, 1만6,305마리가 있고, 3km 이내에는 4,170마리가 사육 중이다.

도는 12일 동물방역과 통제관을 ASF 발생 농장에 파견해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미 한 달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철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정밀검사를 마쳤다. 앞으로 주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추가 확산을 막을 예정”이라며 “차단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2 13 ()

12

확진 농장 500m내 2만여마리 사육 초긴장

양양 양돈농장서 ASF 확진

양돈단지 출입 전면 차단 역학조사 착수

추가 확산 우려 인근 농장 살처분 여부 촉각

【양양】양양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확진이 나오에 따라 양양군 등 방역 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양양군 손양면 양돈단지에 서 16마리가 죽어 군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2일 새벽 11마리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 등은 손양양돈

단지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11마리가 죽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2,200마리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군 등은 양돈단지 입구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ASF가 발생한 농장 주변 500m 이내에는 5개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2만여마리를



◇12일 양양군 손양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육,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군은 일단 인근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여부에 대해 정부

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양양에서는 2021년 1월 초 서면 내현리 산속에서의 멧돼지 사체에서 ASF 양성 판정이

나온 적이 있다.

손양양돈단지 주변은 야생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가 2중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야생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대규모 양돈단지의 경우 사료 공급 등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감염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차단방역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06



강원도경제진흥원 수출상담회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홍경수)은 최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O2O (Online to Offline) 토탈 수출 프로모션' 수출상담회를 진행, 총 160만달러 (약 20억3000만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江原日報

2023 02 13 ()
01

영동 '최대 30cm' 폭설 동해안 강풍·너울 주의

13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동지역에는 비와 눈이 내리겠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12일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예상 적설량은 산지 5~30cm, 동해안 2~8cm다. 13일 낮 최고기온은 춘천 8도, 원주 9도, 강릉 4도를 기록, 평년보다 1~5도 높아 포근하겠으나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다.

이날 오전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시속 35~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고 있어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 23

재원 이양 병행돼야 실효성 있어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부처 권한 지자체 이관 바람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현행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4대협의체장과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회의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빠른 조율을 거쳐 하반기에는 결정돼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개칭하고, 지방 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신설해 안전 발굴과 조정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과제별로 자문단을 설치해 갈등과 대립으로 조율이 어려웠던 지점을 전문적인 방향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와 지방동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내실 운영 및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욱 대등한 위상으로 변화하는 실질적인 운용이 돼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57개 과제를 선정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업무

를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등변경 권한, 대중골프장 승인권 등 국토산업 고용복지 교육 제도 6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지역의 실질적 발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지역에서 직접 권한을 행사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주민 중심 자치제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방이 담당할 것이며, 중앙엔 어떤 업무를 남길 것인지 배분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재원의 이양입니다. 권한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재원 이양 정책이 병행돼야 실효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쇠퇴하는 지방에 활력을 가져오려면 중앙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해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예산 규모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 5대5 실현이 따라야 합니다. 차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으로의 재원 이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13 ()
/ 23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경종 울렸다

-납북선원에 국가사과 권고, 지역사회 명예 회복 도와야

동해안 관심사인 '납북귀환어부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 결과가 2년 만인 최근 나왔습니다. 54년 전 대양호 등 어선 23척이 동해에서 조업 중 북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선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실상이 공표됐습니다. 수사 정보 사법기관이 구타와 감시 사찰을 저지르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을 휘둘러 인권을 짓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사과와 피해 및 명예에 대한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당시 문건과 재판기록, 진술서 등을 조사한 결과 납북 귀환 선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불법 가혹행위는 다방면에 걸쳐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원 150명은 1968년 10, 11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으로 끌려간 피해자인데도 수사과정에서 갖은 구타를 겪으며 월선 및 간첩 지령이라는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합동심문 및 경찰서·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한 고문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낙인과도 같은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고 반공법으로 형사처벌돼 형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인척까지 길게는 수십년 동안 불법

감시와 사찰, 취업의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규제 등을 당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이 평생 괴롭힘이 들기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정보기관 공무원들은 선원 압수물에 대해 일정액을 포상하는 '보로금'까지 받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원의 지인을 정보망으로 활용해 감시와 정보수집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자행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상시로 사찰했습니다. 심지어 납북 귀환 선원을 대북작업에 쓰기 위한 공작도 여러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 81, 속초 72, 동해 28, 강릉 25건 등 강원도내 납북 귀환 선원 인권침해 사건 및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 탄압 등 2기 위원회에 규명을 요청한 사건은 238건에 달합니다. 위원회 운영 기한이 제한돼있는 만큼 신청 사건이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에 분발해야 합니다. 강원지역사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에 기여하도록 기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02 13 ()

/ 19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프로젝트 마련돼야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강원도 내 소상공인 32명은 평균 6,400만여원의 빚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보증지원기업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들은 폐업 당시 평균 6,391만원의 대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5,000만~7,000만원(28.1%)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도 21.9%나 됐다.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생계가 곤란할 것이다. 더구나 많은 부채를 자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휴·폐업하는 중소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9,682억원으로 4년 만에 77%나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의 수도 지난해 633곳으로 4년 전보다 182%나 증가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 68개로 전년의 4배 이상 늘었다. 우량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 규모가 이 정도이니 도

내 일반 산업단지 상황은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 폐업 소상공인 중에는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영업을 이어 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개업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은 25%로 집계됐다. 경영 악화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도 쉽지 않았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평균 1,468만원이었다. 폐업 후 도내 소상공인들은 '가계 경제 어려움(71.9%)'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도내 소상공인 5명 중 1명(18.8%)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다. 이들의 폐업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문을 닫거나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 재창업이나 전직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재기하기도 힘겨운데 가능하겠는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경기 침체로 꿈 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물러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프로젝트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2 13 ()
/ 19

응급실 운영체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중소 병원 응급실은 진료과별로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전문의가 모자라 야간 및 주말 등 비상진료가 필요한 시점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지나치게 몰려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응급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제도 운영체계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응급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응급실에는 우리나라처럼 대기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 미국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보험이 지원되고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해 응급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만 응급실을 방문하게 유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지방의 응급실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는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자 의료원 측은 단축 운영에 돌입했다. 강원도가 인력 대책으로 '인제 고성 양양 등 인접 시·군 공중보건의 활용'을 제안하면서 각 지역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미 강원도 내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다 이들이 없을 경우 지역은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

도내 활동 공중보건의 수 갈수록 줄어
주민 생명·안전 보호 못 받는 지역 많아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 늘려야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10분이 생사를 가른다. 문제는 의료인력 확보다. 지역 병원이 전문의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병원에 전문의가 1명 뿐인 진료과목은 해당 전문의가 365일 비상대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응급실에 갔으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2021년 예산설명서'를 토대로 전국 응급의

료·분만·소아청소년과 취약지 현황, 예산 지원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취약지는 18개 시·군 중 15곳(83.3%)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보건복지부 기준 의료취약지는 크게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인공신장실취약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응급의료취약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의미다. 응급의료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할 여러 현안 중 병원 응급실 운영 문제는 기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우선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있다.